다산포럼

입시 문제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정약용(丁若鏞)은 젊은이들이 과거 시험 준비에 매몰되어 올바른 학문의 길을 못 찾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바 있다. '목민심서' 예전(禮典)조에서 수령의 임무로 보아 과거 시험을 권장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서당에서 문자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십팔사략(十八史略), 통감절요(通鑑節要), 백련구(百聯句), 격몽시(擊蒙詩) 등을 읽고 나면 잘못 굳어진 사고 체계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한탄한 것이다. 그리하여 뜻 있는 수령이라면 자신의 고을에서 열 살 안팎의 어린 수재들을 손수 깊이 있게 교육시켜서 국가에 별도로 천거할 인재로 키워낼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직 과거 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해 피상적으로 읽고 기능적으로 배우는 역량은, 조선 왕조에 필요한 역량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박은식(朴殷植)은 서간도 망명지에서 저술한 소설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에서 과거 제도가 조선 왕조 멸망의 한 원인이었음을 상기하며 더 철저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는 중국 제왕이 천하의 인재를 소멸시킬 야심으로 시행한 것인데, 조선도 이를 흉내 내어 인재를 소멸케 한 것이 800년이란 말인가"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된 과거 시험은 인재들의 정신을 빼앗아 제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규정하고, 고려와 조선을 이어 그 제도를 타파지 못한 것을 꾸짖었다. 국망을 겪은 세대로서 앞 시대의 비판을 더욱 극단화한 것이다.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도입한 과거 제도가 세습 귀족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데에 전혀 무용했으며 시험을 준비하며 얻는 지식이 전혀 무익했으랴만, 잘못된 사회 구조의 재생산 도구로 활용되면 무익을 넘어 해악을 끼치게 된다. 특히 조선 후기의 과거 제도는 온갖 부정을 통해 권력 세습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왕조 사회를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골라내는 일 자체는 공정할 수 있다는 착각이 횡행하지만, 어떠한 시험 제도도 사회 구조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올해 6월 1일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고사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되었고, 교육부 차관은 출제를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할 예정임을 발표하고 곧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으며, 쟁점이 된 문항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교육부 장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킬러 문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다. 유명 대입 강사들은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다면 변별력이 없어서 대입 과정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학 진학률이 74%에 이르는 현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시험 시간 내에 도저히 읽을 수 없을 분량의 지문을 제시하거나 지정된 학습 범위를 초과하는 고급 지식을 요구하는 소위 킬러 문항의 출제 의도를 따지는 것은 공교육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 수반이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준킬러 문항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선전하는 사교육 자본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면, 대통령의 질타가 공교육 정상화의 목표를 제대로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돈을 더 지불해야 할지 수험생들만 난감해진 셈이다.

대학 입시에 집중된 관심은 고등 교육의 무력함과 대물림의 사회 구조를 외면하게 만드는 데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 어떻게 배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학생의 미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학 입시에 자신과 가족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 행동이라고 믿게 된다. 서울대 신입생 중에 강남 출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신념이 빚어낸 비합리적 결과물이며, 사교육이 이 틈에 이권 카르텔로까지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 세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어 대물림되는 사회를 개혁할 의지도 없고, 순위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을 순위대로 졸업시켜 놓는 무기력한 고등 교육을 혁신할 전망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입시 문제로 정신을 빼앗는 일이 아닐까.

NGO 칼럼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를 묻는 시대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우리 아부지가 '너는 고생하지 말고 비단처럼 편히 살아라' 해서 이름 한자에 비단 금(錦)을 썼던가 봐. 그래서 내 이름이 양금덕이여."

양금덕 할머니는 1929년 나주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호적에는 1931년으로 2년 늦게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병원도 없고 약도 귀할 때라 아이들이 아파도 손도 못 써보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켜보다 한두 해 늦게 올리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다.

양 할머니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신음하는 식민지였다. '비단처럼'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염원은 어쩌면 이런 어두운 시대를 탈 없이 비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는 아버지의 바람처럼 되지 않았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마침내 1937년 7월 중일 전쟁을 시작했다. 급기야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미국 해군이 주둔하던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벌였다. 그야말로 이성은 마비되고 살육의 광기만이 넘쳐나는 시대였다.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 '물자'도, '사람'도 닥치는 대로 뽑아 '총동원'할 수 있는 법이었다. 일제의 군홧발 아래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처지야 두말 할 것 없었다. 조선은 일본의 병참 기지, 즉 보급 창고였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내내 '급장'을 놓치지 않았다. 뭣이든 남한테 뒤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매년 우수상을 받은 내력으로 빽빽하다. 하지만 전쟁의 광기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비켜 가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1944년 5월 말 일본 길에 나섰다.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해서 상급학교도 갈 수 있다" "일본에 가지 않으면 너 대신 부모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회유와 강압 때문이었다. 나주초등학교 6학년, 열네 살 때의 일이다.

일본에서의 강제 노동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해방 후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아픔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온 이들을 멀리했다. 미쓰비시 비행기 공장에서 죽도록 일했다 해도 도무지 믿지 않았다. 일본에 갔다 온 것만으로 곧 일본군 '위안부'로 여겼기 때문이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도 번번이 외면당했다.

결국 어떤 할머니는 평생 결혼을 포기한 채 홀로 살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어떤 할머니는 이미 한 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남자의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가기도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부모의 만류 때문이었다.

어렵게 가정을 이뤘더라도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소문을 알게 된 남편은 "속아서 결혼했다"며 날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부인을 두고서도 대놓고 두 집 살림을 차리거나, 가정 불화 끝에 끝내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9월 집을 찾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쓴 편지에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로 배 한 척을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6일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 대신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대신하겠다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즉 우리 기업으로부터 뜯은 '기부금'을 '배상금' 대신 '판결금'이라는 포대 갈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 큰 결단'이라고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양 할머니한테는 어린 아이들을 끌고 간 그때의 일본이나, 일본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내다 판 지금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가 대통령한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를 묻고 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기 고

독일 통일, 그리고 우리는

강구섭
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과거는 현재에 대한 최고의 안내자다.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이 방법뿐이다" 정치철학자 볼의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통일은 통일의 선행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이에도 불구, 수십 년에 걸쳐 이질적으로 발전한 두 체제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 세대의 시간이 경과한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광범위한 통합 정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서독 주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한 세대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독일의 현 상황은 남북한 주민의 평화적 공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숙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통일 초기, 서독은 동독이 서독과 유사한 생활 수준에 도달하면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 수준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통일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었다.

지난 30년간의 통합 추진을 통해 동서독 경제적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 2019년 기준으로 동독 지역의 생산 수준은 서독의 80% 수준에 근접했고 실업율도 6.4%(같은 시기 서독은 4.6%)로 나타나 20%에 근접했던 2000년대 중반 시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소득 현황도 서독의 85%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동독 지역 및 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초기부터 동독 주민이 인식했던, 새로운 상황에서의 차별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2020년 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동독 주민의 59%가 자신을 독일의 2등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 주민이 느끼는 이러한 차별 인식은 서독 주도의 통일 과정에서 '체제 경쟁의 패배자'로 치부되면서 이전 삶이 평가절하되었던 동독 주민의 경험에 기인한다. 통일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동독 주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결여된 채, 새로운 체제 적응의 고단함에서 느끼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부적응의 산물'로 간주되었다.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제가 동독 주민의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사회에서 '무능력자'로 전락한 동독 주민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동독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성 정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동독 주민의 판단은 그들 사이에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변함없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사회의 변화 상황과 맞물려 계속 독일 사회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는 물적 조건의 완성이 성공적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동의 노력이 선행될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부담의 증가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동서독보다 훨씬 갈등의 골이 깊은 남북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심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적 측면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민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남북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경험이 그것이다.

社說

전 시장 아들 땅 용도 변경 의혹 철저한 규명을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법인이 행정 절차를 어긴 채 취득한 산업단지 제조 시설(공장) 용지에 대해 지자체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지원 시설(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업 용도인 지원 시설 용지의 분양가는 제조 시설보다 두세 배 비싸 용도 변경 자체에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산구,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주인 A법인은 2021년 12월 광산구에 소촌산업단지 내 제조 시설 용지 4500㎡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토지는 A법인이 2018년 3월 19억 5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법인 측은 용지 매입 과정에서 광산구에 취득 관련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용지는 관련 법에 따라 사전에 거래 가격은 물론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 때까지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A법인은 해당 용지를 서비스 업종인 '스마트 자동차 AS센터' 부지로 활용하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광산구는 법률에 따라 A법인의 신청을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용지의 환수까지도 검토했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해 지난 4월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덕분에 해당 용지의 감정가는 41억 5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한데 광주시와 광산구는 해당 법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1년 넘게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국 의원의 지적처럼 용지 매입 전 사업 계획서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매입 후 3년간 생산 활동도 하지 않았다 하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용지 변경을 철회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광산구의회 차원의 특별 조사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안일한 기상 방재 의식, 재해 키운다

광주·전남 공직사회의 안일한 기상 방재(防災) 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방재 기상 업무 담당자 가운데 기상청의 방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두 명뿐이었다. 2020년 30명에 달했던 수강 인원이 2021년에는 아홉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더욱 급감한 것이다. 광주 일선 지자체도 수강 대상자의 82.8%가 방재 교육을 받았지만 2021년 26.3%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46%에 그쳤다. 전남도 지자체와 기관 담당자 역시 2020년 13명, 2021년 32명, 2022년 43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매년 수강 대상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방재 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법제화됐다. 기상법 제35조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방재 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교육은 재난 관리 체계와 기본법,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 기상 위성 레이더 영상의 이해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광주·전남 지자체 담당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 선정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도 참석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고 매년 교육이 비슷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준 장기 가뭄, 수재 등이 모두 기상과 깊이 연관돼 있다. 공직자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방재 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는 방재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방재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도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개미 잡는 유상 증자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增資)에는 무상 증자와 유상 증자가 있다. 무상 증자는 주주들의 출자 없이 회사가 돈을 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인데 반해 유상 증자는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분배한다. 잉여금이 있는 회사는 무상 증자를 통해 주주 환원에 나서지만 돈이 없는 회사는 주주들에 손을 벌려 빚을 갚거나 새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 주식 시장에서 통상 유상 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이유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가 임상 실패로 폭락하면서 17만 명의 소액 주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상장 폐지 위기를 극복하고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저가에 발행한 유상 증자 물량이 올해 초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또다시 주주들을 울리고 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으로 유상 증자를 했는데 당시 주가의 26% 가격에 발행한데다 보호 예수 기간(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기간)도 짧아 대규모 물량 출회에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1위 영화관 운영회사인 CJ CGV가 1조 200억 원의 유상 증자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발행 규모도 역대급이지만 56%를 주주 배정으로 하면서 가격도 당시 주가의 절반 가격으로 발표해 사흘 만에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다. 주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분의 절반가량을 가진 CJ 지주회사는 정작 소액만 출자하면서 비상장 자회사의 현물 출자로 CGV 지분은 유지한다는 데 있다. 유상 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고 정작 신사업에는 생색만 낼 정도로 투자하는 점도 주주들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주주들은 개미 호주머니를 털어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일반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들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대기업조차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해 개미들의 주머니를 터는 관행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미 잡는 유상 증자, 국내 주식 시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